

# 光则日뢖



##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30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에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권한 사유화로 헌법가치 훼손" ··· 벌금 1185억원 선고공판 4월 6일 열려 ··· '20년 최순실'보다 중형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 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 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 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 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 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 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 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 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 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 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 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 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안아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 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 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 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 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 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 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신대 신입생들 소원풍선 날리기 27일 오전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소원 풍선을 날리고 있다.

##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 확실시

### 후보군 윤곽 … 바른미래 주승용 불출마 선언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지사 후 보군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애초 후보군으로 꼽혔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마는 확실시돼 보이는 반면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이 27일 불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후보 인 이개호 국회의원의 거취 문제가 중앙당 과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산대학교 www.kwangshin.ac.kr 의원은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말께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목포) 의원이 아직까지 본인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의원 최측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남지사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권노갑 고문과 만나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사실상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광양시장·담양군수 ▶55

3·1절 마라톤 D-4 "우리가 뛴다" 광주 기아자동차 마라톤클럽 ▶20면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평당 돌풍을 일 으켜 광주·전남에서 확실한 뿌리를 내리 고 세확산을 위한 당 차원의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로서는 부인의 와병 등 가정사 문제도 크지만, 전 남지사 출마를 요구하는 당안팎과 지역 정 치권의 요구가 많아 출마를 할 수 밖에 없 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평당 목포지역위원 장 교체 준비 등을 거론하면서 박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임 지 역위원장 인선을 준비중인 것 아니냐는 분 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평당이 최근 전 국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오해인 것 같다.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초 전남지역을 샅샅히 훑은 탓인지, 당안팎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이 제가 출마해야줘야 한다는 요구가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출마 뜻을 접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최근 중앙당이 이 의원에 대한 불 출마 요청이 있었지만, 이 의원은 도당위 원장직을 사퇴하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의원은 "중앙당에서도 저의 출마에 대해 동의를 했다"면서 "애초 3월12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었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예의도 있고, 다른 광역단체 장 선거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본 뒤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환노위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이다. 〈관련기사 14면〉

개정안은 그동안 휴일로 구분했던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 간으로 못 박았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적용을 받는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 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 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 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 종에서 5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 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 서 빠진다.

아울러 소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 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